

제294회 정례회
2010. 9. 16(목)

심 사 보 고 서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16.

행정문화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8월 26일

정지숙 의원 외 9명

2. 회 부 일 자 : 2010년 8월 3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10. 9. 6.) 상
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 대체)

1. 제안이유

-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한국인 및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자 한·일간의 중요한 현안임.
- 충청북도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 하루속히 일본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함.
-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장용대)

- 본 안건은 2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위안부’)화 한 것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가 제안한 것임.

- 일본군위안부는 1993년 이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 234명의 생존자 중 이미 135명이나 사망하고, 99명만이 생존한 상태이며,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2006년 7월 5일에는 당시 생존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임.
-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엄청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관계의 국가간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충청북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 시의회, 기요세 시의회 등 14대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 2010년 3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정부 부서와 국회, 그리고 일본대사관 등 관계단체로 이송하여 충청북도의회가 일본군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충청북도의회는 세계 제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한국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화 했던 참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20여년 이상을 활동해 온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장구한 노력을 적극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미국 등 세계 각국 의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2008년 3월 일본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 14개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적극 지지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충청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9. 1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